# 전남대병원 '공공의료 외면' 환자 편의보다 돈벌이 급급

## 국감 지적, 특실 많고 취약계층 의료비 감면 적어

호남지역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이 일반 병실(다인실) 보다는 수익이 높은 개인병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감면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를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연간 억대의 부담금을 물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계속 외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이른바 '돈이 되는' 개인병실은 많이 보유하면서도 5인실 이상 '기준병상' 설치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전체 855개 병상 가운데 50.1%인 428개가 5인실 이상 기준병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기준병상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전남대병원의 기준병상 비율은 병상 수가 40개에 불과한 서울대치과병원을 빼면 국립대병원 가운데 사실상 꼴찌였다.

반면 최상급인 VIP실, 특실, 1인실 비율은 8.7%로 가장 높았다. 병실 규모별로는 VIP실 병상이 1개, 특실 31개, 1인실 42개, 2인실 184개, 3인실 165개, 4인실 4개였으며 기준병상 가운데는 5인실 25개, 6인실 403개였다.

개인병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급여 외에 발생하는 돈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결국 병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감면액 비중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총 진료비 지원 금액(총 감면액)을 의료급여환자로부터 얻은 총 진료비 수입으로 나눈 값(감면액 비중)을 비교한 결과 평균 0.65%이었으나 전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0.01%로 가장 낮은 감면액 비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억대의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장애인 고용률 위반으로 2006년 5천400여만원, 2007년 7천800여만원, 지난해 1억1천3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 기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2007년 1.19%(21명), 지난해 1.15%(24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현재도 1.0%(24명)에 그쳐 전남대는 거액의 부담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3% 이상, 민간기관은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남대병원은 지난 상반기에만 4천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전남대병원에는 153건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87건에 걸쳐 4천100여만원이 환불됐다.

황우여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일반병실 확보율이 낮은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으로 일반병실 확보율을 60~80%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독감 백신 바닥나자 "사망사고 때문 중단"

## 광주 서·남구 '거짓 핑계' 공지문 내붙여

신종플루 불안감으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란(大亂)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독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신이 바닥나자 면피성 공지문을 부착,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구(區) 보건소는 지난 19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했다. 독감 백신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백신 확보량은 당초 목표 보다 2천 명분이 적은 1만3천 명(86.6%)분이었다. 독감 예방접종이 중단된 지역은 농성 1·2동(洞)과 화정 1·2·3동이다.

남구도 올해 당초 목표보다 3천380명 분이 부족한 1만1천620명 분의 독감 백신을 확보했으나 모두 소진돼 20일부터 접종을 중단했다. 접종이 연기된 지역은 주월동과 효덕동이다.

그러나 독감 예방접종이 연기된 서구와 남구 관내 동 주민센터는 해당 지역 주택가와 아파트 승강기 입구 벽면에 '최근 독감 예방접종 직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에 대한 재검증 후 다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부착했다. 독감 백신이 바닥났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주민 정모(31·농성동)씨는 "애초 독감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데, 자신(구청)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독감 백신이 바닥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독감 예방접종 후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 주의 환기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이달 말까지 독감 백신 부족분을 확보, 독감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와 북구는 28일까지 예정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

### 경로당 음식제공 서구의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21일 지방 선거에 출마한 동료 당원을 돕기 위해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송모(49) 의원과 정당원 김모(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접대 강요' 전남대병원 교수 직위 해제

전공의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강요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입건된 전남대병원 교수가 최근 직위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 교수가 최근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해제당했다.

이에 앞서 문제의 교수는 지난 9월 초 전공의 수련과 진료 등 병원 업무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번 직위 해제로 인해 사실상 의대 교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남대는 지난 9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와 전공 및 전임의 이상 면담 및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수의 최종적인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성 취업·창업박람회**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광주여성 취업·창업박람회'에는 5천여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심각한 여성 일자리난을 반영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인기업 50개 업체가 참여, 1천명을 상대로 1차 면접을 실시했으며, 별도의 2차 면접을 거쳐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만취 여고생 "남친 불러달라" 소동

**쌍나팔**

○…광주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만취한 여고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달라"며 자살 소동을 벌였으나 119 구조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4층 바깥쪽 계단에서 여고생 A(18)양이 난간을 붙잡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것.

○…A양은 만취상태에서 "남자친구를 불러달라. 그렇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30분간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과 119구조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아래에 안전매트를 깔고 투신에 대비.

○…30분간 대치하며 설득하던 119구조대원들은 A양이 한눈을 파는 사이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A양을 붙잡아 무사히 구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광양 동호안 붕괴 본격 수사

###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이 광양 동호안 방조제 붕괴 및 해양오염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21일 동호안 사건 수사를 위해 박순배 검사를 팀장으로 환경업무 전담 이현정 검사와 검찰 수사관 2명,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과 광양시청 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은 또 이번 동호안 사태를 계기로 광양, 여수 등 광양만권 기업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환경문제 전담 검사(이현정 검사)를 두기로 했다.

김회재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그 영산강환경청이나 경찰 등의 조사 상황을 지켜봐왔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사소한 민원신고 112 출동 안한다

### 경찰, 인력 낭비 막기

경찰이 인력의 낭비를 막고 중요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소한 '민원성' 112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모든 사안에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는 현행 112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긴급한 신고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현장에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불법 주차나 인근 소란 등에 대해서도 일단 출동, 정작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올 상반기 접수된 112신고 9만9천521건 가운데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신고는 13%에 그친 반면, '민원성' 신고는 38.5%에 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투자금 내놔" 감금 폭행 운수업체 대표 등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1일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직장 부하직원을 동원해 농산물 유통업자를 감금·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광주 모 운수업체 대표 심모(37)씨와 부하직원 이모(29)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의 친구 김모(29)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 기자 golee@